

배포
2023.7.10.(월)

보도자료

보도
2023.7.10.(월)
16:00 이후

제목 후안무치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 총 6 면

발신 :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문의 :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 김경수(010-9000-5895)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 거부와 보복성 징계를 규탄한다!

후안무치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7월 10일(월) 16:00-16:30

장소: 평택대학교 정문 앞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공공성연대)는 7월 10일(월) 오후 4시에 평택대 정문 앞에서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성연대는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현 이사회 구성 관련 및 세금으로 운영된 사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선재원 교수에 대해 지난 6월 23일에 보복성 중징계(정직2월) 했다고 밝혔다.

이계안 이사장 거부한 정보공개 사항은 자신이 이사장이 된 이사회 구성 관련하여 1. 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 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 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이다.

이동현 총장이 거부한 정보공개 사항은 자신이 단장을 했던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2017-2020) 관련하여 1. 기자재구입비, 사업단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지출결의서, 2. 사업추진, 협약기업 개별면담, 교육과정개발 회의록, 3. 산업체와의 워크숍 보고서이다.

공공성연대는 대학의 민주성, 책무성, 공공성을 짓밟고 퇴행의 기득권 강화로 가는 평택대의 행태를 바로잡아 선재원 교수를 지켜내고,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2023년 7월 10일(월) 16:00-16:30

장소: 평택대학교 정문 앞

주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 사회: 공성경(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고 오일환 전 평택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 추도

- 약력 및 활동소개: 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 기자회견 발언

- 노중기 한신대 교수
- 장순원 사회교육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박귀현 전국교수노조 경인지부 계원예대지회장
- 김중곤 평택대 민주총동문회 조직국장

4. 질의응답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

후안무치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한다!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에 취임한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없고 발전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사회 성립과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했고, 정보공개를 주도한 선재원 교수를 보복성 중징계 했다.

우리는 공공성강화 추진 대표사학 평택대에 취임하여 대안 제시에 실패했고 정보공개도 거부한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후안무치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현 이사체제 성립과 세금으로 운영한 사업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우리는 평택대 현 이사회 성립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계안 이사장은 거부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1. 이동현 현 총장이 위원장으로 재정기탁자 선정을 주도한 대학정상화위원회 운영자료, 2. 재정기탁자 모집 공고로 접수된 자료, 3. 재정기탁자의 기부내역, 4.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내역이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2017-2020)의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사업단장이었던 현 이동현 총장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1. 기자재구입비, 사업단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지출결의서, 2. 사업추진, 협약기업 개별면담, 교육과정개발 회의록, 3. 산업체와의 워크숍 보고서이다.

우리는 평택대가 재정기탁자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할 정도의 재정부족 상황이 아니고 장기발전을 위해 공익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구재단 직계가족들을 횡령, 배임, 업무방해, 사립

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징역 2년 및 1년 6월이 확정되었다(2022.10.13.). 법원은 현재 이계안 이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이사장실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6천 5백만 원, 조기흥이 2013-2014 업무상황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 지출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 2억 3천 6백만 원, 조기흥이 상임이사로 재직 당시 보수 및 차량제공 금액 3억 4천 4백만 원을 교비횡령으로 확정했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구성된 현 이사회 체제에서 이전에 없었던 지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상임이사인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보수, 이동현 총장의 인상된 수당이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현 이사회 성립과정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사업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2. 선재원 교수를 보복성 징계한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재원 교수에 대한 탄압은 거듭된 고소가 불기소로 처리되자, 반복적인 교내 징계로 전환되었다. 평택대 교수회가 주도하고 학생, 직원, 시민단체, 교수단체가 참여한 조기흥 전 이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2017.4.4.) 후에 조 씨는 선 교수 및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2017.6.2.)했으나 불기소되었다(2017.11.15.). 교수회 요청으로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했고(2017.9.26.-29, 10.11-13, 11.29-30.), 조 씨와 직계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2018.5.3.). 조 씨는 선 교수와 교수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2018.6.11.), 불기소되었다(2018.12.31.).

미흡한 교육부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1기 임시이사회가 법인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2019.1.21.-5.20.), 조치가 늦어졌다. 평택대 교수들은 2기 임시이사장에게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평택대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교육부에 법인종합감사 조치를 평택대 이사회에게 촉구하도록 요구했고(2021.3.22.),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기 임시이사장은 선 교수에 대한 다른 건의 징계를 추진하여 결과(견책)를 통지 했다(2021.7.14.).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징계의 근거인 인사규정이 불법 개정되었다고 판정했

다. 평택대 교수들은 법인종합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했고(2021.7.19.),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2기 임시이사장은 또 다른 건으로 징계를 추진하여 선 교수를 해임시켰다(2021.8.9.). 그러나 교원소청위원회는 징계를 취소했고 선 교수는 복직했다(2022.2.3.).

이번 징계는 2기 임시이사회가 중단(2022.11.7.)한 징계를 이계안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것으로, 선 교수에게 중징계인 정직2월을 통지했다(2023.6.23.). 징계의결요구권자로 이계안 이사장이 제시한 징계사안은 1. 인권센터장 재직기간 중에 인권센터 업무에서 발생한 책임을 져야하고 생활협동조합 설립업무를 부담 지시켰다는 것, 2. 임용 및 승진비리, 교비횡령, 구재단 복귀, 대학정상화위원회, 공익이사 영입 등 현 이사회 성립과정에 관한 의견제시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선 교수는 1. 인권센터 업무에서 발생한 책임 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생활협동조합 업무 건은 직원의 협조로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2. 명예훼손 건은 공공성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평택대 복지시설은 조기흥 가족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부패의 온상이었다.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로 조 씨 친인척들이 무상으로 매점들을 운영했고, 학생들의 기숙사를 자신들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식당이 이중 계약되었으며, 교직원식당 운영이 중단되자 그 자리에 무단으로 코인 노래방이 설치되기도 했다. 선 교수는 이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위원회 설치와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이동현 총장 최측근의 얘기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생활협동조합의 담당부서가 없었을 때 진행한 업무를 부담 업무지시로 간주하여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평택경찰서는 조 씨 자녀 총무처장이 눈감아 준 학생식당 이중계약을 범죄사실로 확정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평택대의 전산시스템 도입 41억 원, 건물 신축 45억 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횡령 등 부실경영으로 재정부족이 발생했던 것이다. 평택대는 서울 광화문에 공시지가 6백억 원 이상의 토지, 안성 및 충남 서산의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04%로 전국 174개 대학 중 21위이다(대학알리미 2021). 교육용 재산으로 경기 남양주에 1만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공익이사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공성강화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면 대학정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동현 현 총장은 재정기탁자 영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계안 이사장은 당시 대학정상화위원장이었던 이동현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2012년 평택대 종합감사에서 이동현 교수 채용과정의 불법을 밝혔고 당시 조기홍 총장을 징계했다. 이계안 이사장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해 의견 제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3. 우리는 선재원 교수 탄압을 막아내고 평택대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중단 없는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가 추진되어 대단히 개탄스럽다. 선재원 교수는 민교협 상임공동의장과 전국교수노조평택대지회장을 맡아 대학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대의 대표적 교수이다. 평택대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애정어린 비판을, 때로는 비전어린 제안을 통해 평택대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교수인 것이다.

결국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대학 민주화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평택대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선재원 교수를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들만의 대학을 만들려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민주성, 책무성, 공공성을 짓밟고 퇴행의 기득권 강화로 가는 평택대의 행태를 바로잡아 선재원 교수를 지켜내고,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0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평택시민재단,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대교수회, 평택대민주총동문회, 공공성강화 평택경제인회